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auri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기본 과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행정정보 개방 범위 확대방안 연구	김영현
	노상주차의 전략적인 관리를 통한 가로공간 개선방안 연구	한수경
	건축자재 통합품질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이종민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유물수집전략 마련을 위한 사전기획 연구	엄운진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상호
수시 과제	산업단지 경관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이상민
	보행편의지수 개발 및 보행정책 평가체계 고도화 연구	한수경
	창의적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김은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	김영현
	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한 규제모니터링 제도화 방안 연구	이여경

❶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행정정보 개방 범위 확대방안 연구

최근 데이터 3법이 통과되어 그간 활용이 어려웠던 개인정보를 가명·익명 정보화를 통해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건축행정정보는 환경, 재난방재, 주거복지, 도시계획, 에너지 등 도시환경과 직결되고 국민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행정업무의 60%이상이 모두 건축행정정보와 연관되어 있다.

세움터(e-AIS), 민간개방시스템 등에서 다양한 건축정보를 이미 공개하였으나, 건축물에너지 데이터와 소유권 변경이력 등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공개되지 못했던 부분이 존재해 왔었다. 특히, 건축도면의 경우, 창업을 기획·준비하는 많은 민간부문에서의 요청이 있어 왔지만 사생활 및 저작권 침해 우려 등으로 활용이 제한적이었으며, 데이터 품질에 있어서도 건축물 준공 이후에 최종 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도면이 상당부분 있을 것을 예측되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건축행정정보 부문에 있어서는 데이터 품질 향상, 분산된 정보체계의 연계·통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성 등에 관한 연구는 별도로 진행되어 왔으나 건축행정정보와 데이터 3법, 저작권 등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부재했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기조에 따라 방대한 건축행정정보의 본격적인 개방·유통에 앞서, 개인정보와 연관된 정보의 개방 확대 방안, 건축도면의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등 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면밀한 법·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건축행정정보에 대한 수요 파악과 함께, 정보 개방·유통 및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

련하는 것으로 건축행정정보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여 단계별 건축행정정보 개방범위를 설정하고, 개방·유통 절차 및 방법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건축행정정보의 개방·활용을 통해 건축과 IT 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 활성화 등 스마트 건축 확대 및 건축서비스산업의 신산업 발굴·창출 기여하고자 한다.

김영현

❷ 노상주차의 전략적인 관리를 통한 가로공간 개선방안 연구

우리나라 자동차등록대수는 2005년 1,540만 여 대에서 2019년 2,370만 여 대로 약 54%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주차공간도 점차 확대되어왔다. 현행 법령에서는 건축 또는 도시개발 시 부설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차공간은 부설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형태로 조성되어 왔다. 반면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설치가 불가능한 도로의 종류만을 간략히 제시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노상주차장의 설치면적은 부설이나 노외주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목적지로의 편리한 접근, 시간단축, 무료주차 등의 이유로 종종 불법노상주차를 일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누구나 이용 가능해야 할 가로공간이 차량에 의해 무분별하게 점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적절한 노상주차는 가로활성화, 차량속도 저감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나, 부적절한 노상주차는 교통사고 위험 및 보행 불편을 야기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해칠 뿐만 아니라 화재, 범죄,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출동차량의 통행공간을 막아 대형재난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차정책을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노상주차가 가지는 양면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도시 내 주차공간 및 가로공간의 면밀한 현황 분석을 통해 노상주차를 금지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야 할 곳, 노상주차가 필요하고 가능한 곳 등을 판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차관리 공급의 개선은 저렴한 주택, 기후변화, 경제개발, 이동수단 선택, 도시디자인 등 도시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저렴하고 빠르며 실현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어 도시정책 수준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하지만 기존의 노상주차 관련 정책은 민원에 대응하는 단편적 접근에 머물고 있어, 노상주차 관리방식에 대한 도시정책적 관점에서의 판단기준과 노상주차장의 합리적인 설치조건 및 방법에 대한 방향 제시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정책 차원에서 노상주차 관리 공급체계를 마련하여 가로공간의 안전성 편의성 증진 및 가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에서 효율성, 형평성, 합리성에 근거한 노상주차 관리 공급을 위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고, 일반 국민들이 합리적인 노상주차 관리를 통한 가로환경 개선 효과를 인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로공간의 질적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한수경

❸ 건축자재 통합품질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최근 연이은 건축물 화재사고 발생 등에 따라 '건축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건축법」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개정('19.4.23.)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이 기존 복합자재에서 단열재,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방화댐퍼, 내화충진구조로 확대되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의4(건축자자재 품질관리 정보 공개)가 신설('19.10.29)되어 불량 자재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 건축자재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성능미달의 건축자재 사용,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현재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를 중심으로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향후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건축자재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건축자재의 관리 필요성 및 위해도를 고려하여 관리 대상을 도출하고, 성능인정, 성능확인, 자체성능확인 등 건축자재별 관리수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건축자재 통합품질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방안, 「건축법」 및 하위규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건축자재 품질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종민

❹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유물수집전략 마련을 위한 사전기획 연구

2020년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행복청이 건립주체로 국토교통부가 운영주체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설계공모가 진행되고 있으며,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전시, 유물 등에 대한 구체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시, 유물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주 중요하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문화기반시설로 제시된 이래로, 그동안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주요 '논의'를 살펴보고,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수집되어야 할 유물을 비롯한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 대한 '공감'과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의 논의에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유물수집전략 마련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도시건축박물관의 유물의 특성 등을 규정하고, 유사기관의 유물수집 사례를 참고로 유물수집 단계에 필요한 관련 규정 등을 제시하고, 일부 시범사업을 통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규정' 등 마련, '유물수집 및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 등이 결과물로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엄운진

❺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건축허가제도는 건축행정 절차의 근간이 되는 행위로 해당 관청이 관계법령에 의거한 적법성을 확인하여 양질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축허가 절차는 민원인이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허가부서에 신청을 접수하면 건축허가 담당부서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건축규정 e-시스템(e-KBC)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건축 관계법령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도적 관점에서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건축허가단계에 집중되어 허가권자의 행정부담이 과중되고 있으며 민원인 측에서는 허가준비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절차 간소화 등 민원인의 편의성 증진과 허가권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건축허가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법령 및 제출도서를 간소화하고 준수여부를 증명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구조설계·설비·방화 등의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건축허가제도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건축허가제도 현황과 건축허가 시 확인법령,

유사 개발행위 허가제도 분석 등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건축허가 절차 및 관련제도 관리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최종적인 건축허가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김상호

수시과제

❶ 산업단지 경관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국가의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현재는 시설 노후화에 따라 산업단지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정주환경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열악한 주차환경과 정비되지 않은 공장건축물, 관리가 미흡한 수목 및 보도 등은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오래된 가로시설물은 범죄안전을 위해하여 종사자 및 방문자의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인접한 자연환경 및 오픈스페이스의 연계가 부족하고, 정비되지 않은 안내체계 등으로 단지의 영역성 및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신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산업단지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발면적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의 수가 증가, 산업단지 시설의 노후화 및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개정 「경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에 대한 경관심의가 시행되고 있으나, 산업단지의 현황이나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 작성 기준 또는 심의기준이 부재하여 경관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심의에 따른 경관개선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산업단지라는 특수한 목적을 갖는 공간에 적합한 경관계획 수립 기준 및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자가 실효성 있는 산업단지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단지 경관을 향상시키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상민

❷ 보행편의지수 개발 및 보행정책 평가체계 고도화 연구

2012년 우리나라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7년 보행안전 종합대책, 2018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차량 소통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국가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 및 보행자우선도로 사업과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개선),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개선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도 서울시 도로다이어트 등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이에 힘입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보행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최근 보행안전 측면에서 보행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도구 개발이 이루어졌다. 김승남, 박수조(2016)는 보행 자전거 통행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녹색교통활성화지수'와 보행자사고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보행안전지수'를 개발한 바 있으며, 후속연구인 오성훈, 한수경(2018)은 앞선 연구의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보행안전지수'와 함께 정책적 노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보행정책지수'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보행환경은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성되어야 하므로, 보행정책의 성과는 보행안전뿐만 아니라 보행편의 측면에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보행편의 수준을 정량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보행편의지수를 개발하여, 보행안전 및 보행편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보행정책의 성과를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행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 간 균형을 고려한 보행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수경

❸ 창의적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2014년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세종시 국책연구단지 이전을 기점으로 2015년에 예정 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었다. 당시, 자체 청사건립기관을 제외한 대다수 기관은 제1연구청사에 입주하였으나 공간부족문제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포함한 일부 기관은 민간시설에 임차하여 이전하였다. 이후 약 5년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연구기관의 인력이 증가하고 조직이 확대되었으며, 그로 인한 가용 공간 부족 등 시설이용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관계기관 및 부처 협의로 제2연구청사 건립 추진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국가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업무공간의 기능과 가치를 새롭게 규정하고 설계 발주 시 반영될 수 있는 공간계획 지침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제2연구청사 건립의 핵심 가치를 창의성과 효율성으로 설정하고 정책연구청사의 조직 및 업무특성을 분석하며 기 조성된 제1연구청사 및 자체 연구청사의 계획 주안점을 검토한다. 특히 현 정책연구기관 사용자의 시설이용 만족도와 수요조사 설문을 통해 제2연구청사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개선사항을 도출하며 더불어 입주 예정 기관 간 TF 운영으로 각 기관의 독자적 업무 및 협력 등이 가능한 공간 조닝, 스페이스프로그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건축사 협업으로 기획안 시뮬레이션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1차적으로는 제2연구청사의 건축계획에 적용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향후 건립될 미래 연구청사의 바람직한 업무공간 계획 가이드를 마련한다는 데 또 다른 의의가 있다.

김은희

❹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한 서비스로, 2008년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3개 부처의 업무협약 아래 국가 R&D('09~'13) 사업으로 개발되었다. 사업 초기에는 방범·방재, 교통 등 두 개 정보시스템의 연계·활용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12, 119, 재난 등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보완되었다. 통합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는 5대 연계 서비스로 ①112긴급 영상 서비스, ②112긴급 출동 서비스, ③119긴급 출동지원 서비스, ④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 ⑤재난안전 상황 긴급대원 지원 서비스가 있으며, 그 외에도 지자체 특성에 따라 환경관리, 불법주차 및 체납차량 관리, 기상예보 등 서비스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부터 보급 사업을 시작하여 2021년까지 108개 지자체에 설치·운영하고, 이후에는 인구 20만 이하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구축단계에서부터 구축 이후 지속적인 운영관리까지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공공 주도의 사업이다. 또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민의 안전, 편의와 직결되어 있어 체감도가 높은 새로운 도시서비스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대비 효과성 검증, 편익을 논하기에는 통합플랫폼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산출하기 위한 지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의 지속적인 성과제고를 위해 사업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성과평가 시기, 평가방법, 성과관리주체, 성과평가의 활용방향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관리하는 통합플랫폼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운영·관리 및 플랫폼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김영현

❺ 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한 규제모니터링 제도화 방안 연구

행정규제는 사회질서 유지나 공공복리 증진 등 특정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이다. 이러한 규제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상의 한계 발생, 사회여건 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1995년 OECD의 행정규제 품질 향상을 위한 권고문은 규제 품질관리 및 합리화를 향한 전 세계적 움직임을 유도하였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규제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는 '규제혁신'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규제 합리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건축규제는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 향상을 위한 다수의 행위제한사항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행정규제이다. 하지만 건축 관련 법령이 복잡·다양하여 법령 간 규정이 상충되거나, 지자체의 개별 행정방침 운영, 인허가 절차상 재량권 남용 등의 숨은 규제나 행태규제가 빈번히 발생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2014), 건축투자 활성화대책(2015), 건축행정서비스 혁신방안(2019) 등을 추진하여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건축주나 건축사 등 피규제자들의 규제 합리화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고 기존 규제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는 등 규제환경은 계속 변화한다. 따라서 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편적 정책 보다는 규제 신설 단계에서 예측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규제 운영 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신속히 발굴·개선하는 등의 제도적·정책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건축규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규제모니터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축규제에 대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규제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여경

제2회 마을재생 세미나 '포틀랜드의 밤'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6월 2일(화) 광주 희재가에서 '포틀랜드의 밤'이라는 주제로 제2회 마을재생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3년 이내 포틀랜드를 다녀온 다양한 주체들이 대형 제조업이 빠져나간 산업공백의 대안으로 소상공인 생태계를 구축한 미국 포틀랜드의 창의적 도시재생 사례를 각각의 시각으로 살펴보며, 포틀랜드의 시사점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에 포틀랜드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으로 '생태계'와 '저지름'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마을재생센터 윤주선 부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주방송 김태관 PD와 윤현석 무등산브루어리 대표, 방지민 프리랜서 작가, 이현덕 론드리프로젝트 대표, 나우매거진 남윤주 에디터가 순차적으로 발제를 이어갔다. 이들은 포틀랜드에서 만난 다양한 장소와 서비스를 소개하며, 포틀랜드 고유의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고방식과 문화적 특성 및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였다.

미국 오리건주 북서부에 위치한 포틀랜드는 '최고의 녹색도시 1위'와 '이상한 사람이 가장 많은 도시 2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로컬=특산품'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지역 내 개성과 균형 간의 접점을 이루면서 지방 중소도시에 특화된 도시재생 사례로 각광받고 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연세대학교 모종린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실시간 채팅 기능을 활용해 온라인 Q&A 시간을 가졌다.

‘포스트코로나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 공동주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6월 4일(목)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포스트코로나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가 국토교통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그린뉴딜, 물류산업 변화, 새로운 공간구조 등을 주제로 국내 석학과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KDI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설명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변화와 그린뉴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는 마켓컬리의 대표 서비스인 새벽배송을 소개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유통업계의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발표하였다.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유현준 교수는 코로나19와 주거공간의 변화를 살펴보며, 도시 및 주거의 향후 전망을 전하였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김기훈 서기관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도시와 집 그리고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를 짚으며, 그린뉴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은희 연구위원, 신한카드 장재영 빅데이터사업본부장, 한국교통연구원 소재현 부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형태·건축산업·교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로컬-리콜 (Local Recall) 오프닝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6월 18일(목) 서울시립대학교 베타시티센터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공동주최하는 2020 세운 글로벌 포럼 '로컬-리콜(Local Recall) 오프닝' 행사를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였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 생산과 도시 공동체를 다시 그리다 – 지금 다시, 도시와 제조업'을 주제로, 탈성장 시대 전 세계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위기를 진단하고, 새로운 로컬의 역할과 시도를 실천적 담론으로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인 크리스티안 탁스의 환영사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우선 로컬-리콜 시리즈 및 2019 포럼 도시와 제조업의 미래 일곱 가지 키워드를 소개하였다. 이후 서울·뉴욕·브뤼셀을 중심으로 세종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부 강우원 교수와 MIT 도시계획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안채원은 서울을, 미국 플랫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센터장인 애덤 프리드먼은 뉴욕을, 벨기에 시티즈 오브 메이킹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인 에이드리언 비커리 힐은 브뤼셀을 각각 맡아 최근 급변하고 있는 현지 도시의 상황을 공유하고, 도시 제조업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각 지역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근 서울·뉴욕·브뤼셀에서 지역적 생산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각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도심 제조업의 위기는 무엇인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전략들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짚어보며, 도시와 제조업의 미래를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건축의 기획과 사전검토의 역할’ 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4월 2일(목) 대회의실에서 ‘공공건축의 기획과 사전검토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사전검토 및 설계공모 대상이 확대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도입되는 등 공공건축 관련 제도와 정책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간연구소 올림 임현성 소장(안양석수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겸임)을 초청하여 공공건축의 기획과 사전검토의 역할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임 소장은 호화청사나 협소한 공간 등 공공건축 품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공공건축 관련 법령과 제도가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고 전하였다. 특히 좋은 공공건축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기획’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획업무의 수행절차를 개선하고, 전문가의 역할을 더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임 소장은 “전문가가 공공건축의 건축기획에 대한 검증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전검토 제도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설계방향의 명확성을 검토한다”며 “최근 사전검토의 대상이 확대되고,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역할 및 설립근거가 마련되는 등 건축기획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사전검토 제도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제1차 건축문화자산 강연회 ‘가치의 이음과 생성 : 체부동 생활문화센터’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5월 18일(월) 중회의실에서 제1차 건축문화자산 강연회를 열었다. 올해 건축문화자산 강연회는 건축문화자산의 가치 발굴 및 증진을 위한 보전·활용의 과정 중에서 설계 단계에 초점을 맞춘 ‘건축문화자산 가치증진을 위한 설계자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에 제1차 건축문화자산 강연회는 지요건축사사무소 김세진 소장을 초청해 ‘가치의 이음과 생성 : 체부동 생활문화센터’를 주제로, 근현대 건축자산이자 미래유산인 체부동 성결교회를 시민 오케스트라 등 음악분야 생활활동 공간이자 지역 커뮤니티 공간인 체부동 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한 과정을 소개하였다.

이 사업은 프랑스식 벽돌쌓기 등 건축사적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양식을 지닌 체부동 성결교회의 특성을 살려 교회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리모델링을 하였다. 또한 한옥 원형을 최대한 살려 복원하되 사용 용도에 알맞은 마감을 적용하고, 벽돌건물과 한옥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김세진 소장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한옥 등 건축자산법」의 우수건축자산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며 “향후 한옥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도 관련 법과 제도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기존 건축물에서 어떠한 요소를 남기고 드러낼 것인지, 어떠한 요소는 소멸시키고 덧붙일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전문가 초청 강연회 '아!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연구공간은?'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6월 4일(목)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회는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 건립을 위해 연구소가 맡은 '창의적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계획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디자인그룹 아침 김한 대표를 포함하여 전문가 3명을 초청해 '아!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연구공간은?'을 주제로 스마트오피스와 스마트워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기존 업무 공간이 개인 책상을 기반에 둔 업무 환경이라면, 최근 새롭게 등장한 업무 공간은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 가능한 네트워크형 공간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를 고려한 스마트오피스는 각 기업과 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스마트오피스 구축 모델은 네 가지로 나뉜다. 스마트오피스의 사용 주체인 사람에 대한 혁신을 우선하는 'Smart Office Human Innovation(SOHI)', 조직문화 혁신을 이끄는 스마트오피스인 'Smart Office Organization Innovation(SOOI)', 공간에 대한 혁신에 주안점을 둔 'Smart Office Space Innovation(SOSI)', 기업문화와 업무혁신을 의미하는 'Smart Office Working Innovation(SOWI)'이다. 이 중 SOHI, SOOI, SOCI를 통해 궁극적으로 SOWI를 도출할 수 있다.

선(線)·면(面) 단위 근대문화유산의 조사·관리 방법론 도출을 위한 강연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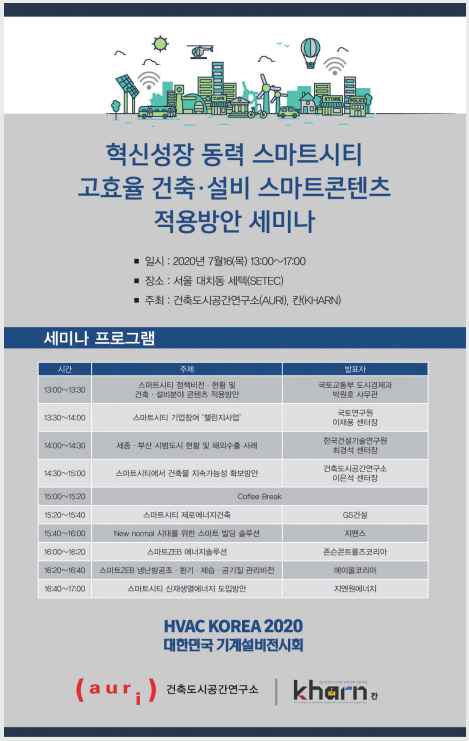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6월 9일(화) 중회의실에서 선(線)·면(面) 단위 근대문화 유산의 조사·관리 방법론 도출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이자 <인천, 100년의 시간을 걷다>의 저자인 이연경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저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걷기, 관찰하기, 기록하기'를 통해 1918년도의 지도 속에서 2018년 인천의 모습을 다각도로 탐색하던 과정을 소개하였다.

과거 인천은 원주민인 조선인과 함께 일본인·청나라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개항도시였다. 이 교수는 2017년 4월 답사를 시작하면서 지역 성격별로 영역을 나누고, 각각의 지역적 특성을 관찰하였다. 관찰의 결과물은 장소 중심의 아카이브로 구축하고,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담은 사진 촬영부터 문헌조사 등과 병행하여 인천의 역사를 단행본으로 엮을 수 있었다.

한편 인천에 자리한 많은 근대건축물은 여전히 철거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건축·도시·역사·문화의 다학제적 연구, 공간 단위의 보존 및 활용 정책 등 연구과제가 남아 있다. 이에 이 교수는 대중인식 변화를 이끄는 강연과 답사활동, 문화유산 관련 행정과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혁신 성장 동력 스마트시티 고효율 건축 · 설비 스마트콘텐츠 적용방안 세미나 개최 예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7월 16일(목) 2020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HVAC KOREA)에서 '혁신성장 동력 스마트시티, 고효율 건축 · 설비 스마트콘텐츠 적용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최근 기후변화, 교통체증, 폐기물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각국에서 스마트시티를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세종 · 부산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고 테마형 특화단지, 챌린지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스마트시티 등 기존 도시와 노후 도시를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가 낮고,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스마트 콘텐츠의 확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 건축물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먼저 도시 · 건축물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성을 알리고자 국토교통부 박원호 사무관의 '스마트시티 정책비전 · 현황 및 건축 · 설비 분야 콘텐츠 적용 방안', 국토연구원 이재용 센터장의 '스마트시티 기업참여 챌린지사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경석 센터장의 '세종 · 부산 시범도시 현황 및 해외수출 사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은석 부연구위원의 '스마트시티에서 건축물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주요 발제로 세미나의 전반부를 구성하였다. 이어지는 세미나 후반부에서는 GS건설, 지멘스, 존슨콘트롤즈코리아, 에이올코리아, 지엔원에너지 등으로부터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위한 실질적 구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0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작품접수: 8월 28일~9월 1일

	1차 심사	2차 심사
준공부문	9월 중	9월~10월 중
계획부문	9월 중	9월~10월 중
사진부문	9월 중	
영상부문	9월 중	

*심사의 상세한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가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이 열린다. 2011년 이후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우리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창조적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 현대건축과 만나다'를 주제로 과거 한옥의 형태와 재료 중심의 재현에서 탈피하여 현대건축과 다양한 방식으로 융합하는 미래형 한옥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공모전은 준공·계획·사진·영상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디지털 매체의 발전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영상 부문이 올해부터 신설되었다.

준공 부문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한옥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주·설계자·시공자 중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계획 부문은 건축물 용도에 대한 제한 없이 공모전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제안이 가능하며, 4명 이내의 팀 또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다. 일반인과 청소년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사진과 영상 부문은 한옥과 관련된 자유주제로 전통 한옥뿐만 아니라 새로 지어진 한옥의 아름다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옥의 의미와 가치를 독창적인 시각으로 담아낸 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작품 접수는 8월 28일부터 시작하여 9월 중 각 부문에 대한 1차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1차 심사 후 계획과 준공 부문에 대한 2차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의 상세한 일정은 2020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전주시 MOU 체결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5월 20일(수) 전주시와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사업화 모델 구상 및 발전전략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두 기관은 ▲주거지재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애로사항 및 현장문제 공유 ▲주거지재생 과제 도출 및 사업 발굴에 필요한 공동조사 및 연구 참여 ▲지역재생 관련 포럼·세미나·교육 같은 행사 개최와 참여 등의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업무협약식 후에는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지역재생연구단장이 전주형 주거지재생 비전과 전략을 설명하고, 연구소와 전주시가 많은 논의와 협업을 통해 마련한 '좋은 주거지 기준'을 발표하였다.

전주시는 도청 이전과 외곽 개발로 인한 인구 유출, 빈집 증가 등 구도심의 저층 노후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재생 정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주거지재생 연구에 선도적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노하우를 더해 새로운 주거지재생 모델과 발전전략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앞으로 두 기관은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정성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지역 맞춤형 주거지재생 사업모델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군산시 MOU 체결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6월 11일(목) 민·관협력(Private-Public Partnership: PPP) 도시재생 추진에 협력하기 위해 군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민·관협력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정보 교류 및 상호 지원에 힘쓰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군산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인정사업 등 군산시의 대표적 민·관협력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현장연구와 총괄기획을 맡고, 군산시는 ▲민·관협력 도시재생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관련 부서 행정협의회 운영 ▲공무원·시의원·주민대표 공감대 형성 등을 담당하며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협약식은 군산시 민·관협력 도시재생의 거점이 될 군산시민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은 고 김중업 건축가의 유작으로, 2013년 군산 예술의 전당 개관으로 장기간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군산시는 군산시민문화회관 재생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현장연구와 총괄기획 ▲설계공모 ▲운영자 선정 등 사업 전반의 협력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군산시민문화회관 재생을 통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민·관의 협력 속에 도시를 재생해 나가는 사업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